

하천·도로 등 공공분야 복구는 '숨통'...민간 피해는 '태부족'

해남·강진·장흥·진도 4개 읍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남도 4개군 지역 피해 1127억 추산에 정부는 256억 '큰 차' 피해액 산정에 농산물·수산물 등 '생물 피해' 제외 문제 전북양식 어가당 피해 수십억 불구 가구당 최대 5000만원 지원

22일 정부가 7월 초 500mm를 넘나든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전남 해남군, 강진군, 장흥군 등 3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농어민들의 피해 복구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 복구 사업비에 국비 지원이 늘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는 도움이 되지만, 민간 피해에 대해서 복구지원 단가도 현실과 맞지 않고 지원을 위한 심사(요건)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해남군, 강진군, 장흥군 등 3개 군과 진도군의 진도읍, 군내·고군·지산면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중앙재난피해 합동조사단 확인 결과,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된 전남 지역 중 해남이 91억 원으로 피해가 가장 컸다. 이어 강진 68억 원, 장흥 63억 원, 진도 진도읍 7억 원, 군내면 8억 원, 고군면 7억 원, 지산면 6억 원 등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확정된 후회 피

해액은 모두 256억원이다. 도로·하천·산사태 등 공공분야 피해가 209억원, 사유시설 피해가 47억원으로 집계됐다.

특별재난지역에는 공공시설 피해복구에 국비가 최대 80%까지 지원돼 지자체에는 적잖은 도움이 된다. 그러나 제도 자체가 공공피해 복구에 방점이 찍힌 터라 주민의 피해 복구에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금이 돌아간다. 주민들에게 주어지는 건 우선 건강보험료, 통신, 전기, 도시가스 비용 1개월 감면이다. 주택 침수, 반파, 전파 피해 주민에게는 각각 200만원, 800만원, 1600만원이 지원된다. 이번 호우로 인한 주택 피해는 침수 571동, 반파 7동, 전파 7동이다.

문제는 농작물, 수산물 등 생물 피해 농어가 피해 복구다. 전남도 집계로는 농작물 피해 61억원, 축산 피해 16억원, 수산 분야 696억원 등 생물 분야에서만 모두 765억원의 피해가 났다. 전북 피해의

경우 3800만마리가 폐사해 가장 큰 피해를 냈지만, 어가당 복구 지원비는 최대 5000만원에 그친다. 그나마 입식 신고서 등 각종 증명이 완비된 어가에 대해서만 지원이 된다. 5000만원 범위에서 지원되는 수산생물 복구지원 단가 기준도 문제투성이다. 양식 시설물과 전복·낙지 등 수산생물 지원 단가는 2015년 이후 동결돼 실거래가의 25%에서 33% 수준에 그친다. 전북 치패는 복구비용 산정기준이 없어 지원대상 제외되고 있다. 농작물 피해 역시 심사를 거쳐 ha(3000평)당 500만원 안팎의 대파대와 농약대가 농가에 지원되지만, 피해 복구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정부의 피해액 산정에 생물이 일절 반영되지 않는 것도 개선해야 할 과제다. 전남도는 해남군, 강진군, 장흥군과 함께 진도군 전체를 특별재난지역에서만 모두 765억원의 피해가 났다. 전북 피해의

대해선 4개 읍면만 받아들였다. 생물 피해액이 일절 반영되지 않아 특별재난지역 선정에 대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초 전남도는 지난 5, 6일 집중호우로 인한 지역 피해가 4개 군에 걸쳐 모두 1127억원으로 잠정 추산했는데, 정부는 전남도 집계 피해액의 22.71% 수준인 256억원만 피해로 봤다. 전남도는 공공분야 335억원, 가옥·농수산물 시설 등 사유시설 27억원과 함께 농작물·양식생물 피해액을 765억원으로 계산했지만, 이는 정부 피해 집계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관한 피해 금액 산정기준에 농작물, 수산물 등 생물피해가 포함되도록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지속해서 건의하겠다. 복구 및 피해지원금 현실화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khn@



광주 전남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개원 정석환 법무청장(오른쪽 네 번째)이 22일 광주 전남지역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 개원식에 참석해 테이프 커팅 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시, 무등산 조망권 확보 위해 고층건물 건립 제한

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 시행 공고 주주거·상업지역 최대 40층 3중·2중 일반주거지역 30층까지

광주시가 무등산 조망권 확보 등을 위해 30~40층 고층 건물 건립 제한을 시행한다. 광주시는 지난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광주시 건축물의 높이 관리 원칙 시행 공고'를 냈다. 적용(운영)기간은 공고일인 지난 15일부터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경관계획 수립일까지다. 적용대상은 건축, 경관, 도시계획, 도시정비, 도시개발, 산업단지 개발 등이다. 시행 공고에 따라 광주의 주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서는 최대 40층까지 건축물 높이가 제한된다.

제3중·2중 일반주거지역은 최대 30층까지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 시는 동별로 층수가 다른 점을 고려해 평균층수(모든 동의 지상연면적 합계를 기준면적으로 나눠 환산한 층수)를 도입하고, 제2중 일반주거지역은 평균층수 23층까지, 제3중 일반주거지역은 27층까지로 높이를 제한했다. 기준면적은 각 동의 지상연면적을 그 동의 층수로 나눈 면적을 모두 합친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 법령에서 건축물 높이에 대해 별도 완화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을 적용하되,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초과할 수 없다. 시는 다만 지역발전 견인시설 유지 등 예외적으로 원칙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40층 이상 건축물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건축물의 높이관리 원칙 특례를 통해 이번 건축물 높이 관리 예외 대상도 분명히 했다. 예외 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이미 지정돼 있는 경우 기존 계획을 인정하되, 계획을 변경해 재심의 대상이 될 경우에는 이 원칙을 적용한다. 또 평균층수 미적용 대상은 ▲민간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원칙 시행 전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을 신청한 경우 ▲원칙 시행 전 교통, 경관, 건축계획 심의를 받는 경우 등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공공재인 도시경관의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건축물의 높이를 관리하기로 했다"면서 "시민들이 도시 곳곳에서 무등산 조망권 등을 누릴 수 있도록 건축물 높이 제한 원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맞춤형 정책 발굴·아이디어 제안' 청년 꿈 향해 출발

전남도 '청년의 목소리' 발대식

전남도는 22일 지역 청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맞춤형 청년정책 발굴과 청년 소통체계 구축을 위해 운영하는 '제5기 청년의 목소리' 발대식을 온라인으로 개최했다. 청년의 목소리는 전남에 사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참여하는 도 단위 청년협의체다. 지역 청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5기 청년의 목소리는 시군 청년협의체의 추천과 공개 모집을 거쳐 직장인, 자영업자, 청년단체 활동가, 농업인, 대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청년 70명으로 구성했다. 앞으로 2년 동안 지역 청년을 대표해 청년활동가로 활약하게 된다. 코로나19에 따라 온라인으로 개최한 발대식에서는 회원 소개, '청년의 목소리'를 이끌 대표와 부대표 등 6명의 임원 선출 등을 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지역 청년의 다양한 의견을 정

책에 반영하기 위해 '청년의 목소리' 주도로 정기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한다. 또 청년이 활발하게 소통하고 정보교류를 하도록 워크숍, 찾아가는 청년정책학교 운영 등 다양한 청년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유연화 전남도 인구정책조정관은 "실생활에서 체감한 문제와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전남도 청년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중심적 역할을 해달라"며 "청년의 작은 목소리까지도 놓치지 않고 귀담아들으며, 청년이 제언하는 청년정책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6월 제4기 청년의 목소리와 도지사 참여 청·정 소통간담회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청년 희망 소통 TF팀'을 조만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TF팀은 문규주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임차리, 농업, 수산 등 10개 실국원장이 참여한다. 청년과 분기별 1회 이상 '소통 간담회'를 열어 그들의 고민을 함께 풀어갈 예정이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전남도, 고병원성 AI 급증에 선제 대응 총력

전남도가 우리나라와 철새 이동권이 겹친 해외 국가에서 고병원성 AI가 급증함에 따라 청정 전남을 지키기 위해 '겨울철 고병원성 AI 중점 방역대책 추진계획'을 마련, 단계별로 행정력을 집중해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겨울철 특별방역대책 기간인 오는 10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소독시설 보강 45억원, 오리농장 사육 제한 48억원, 통제초소 50억원, 소독약품 및 생석회 14억원, 난방비 7억원 등 총 164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프랑스, 덴마크, 독일 등 해외국가의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전년보다 40배 급증했다. 프랑스에선 가금농가 발생도 수직 상승하고 있다. 주

변국인 일본, 중국, 대만, 베트남 등에서도 야생조류와 가금농가에서 지속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는 특별방역대책 기간 이전인 9월까지 농장 방역의식 고취와 열악한 방역시설 개선을 위해 현장 방역관리 확인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9월까지 모든 가금농장을 특별 점검해 미흡한 사항을 즉시 보완하고, 미이행 농장은 겨울철 사육 제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오리 입식 신고제를 도입해 모든 오리농가를 5단계로 점검 후 적합한 농가만 입식을 승인하고, 가금 농장별로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현장 방역수칙 이행 확인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자산·공제 3,000억 달성 기념 경품 대잔치

■응모기간: 2021년 4월 15일 ~ 9월 30일 ■추첨일자: 2021년 10월 20일

1등 스타일러

2등 노트북

3등 음식물처리기

4등 로봇청소기

5등 공기청정기

응모권 지급 조건

- 출자금 신규 및 추가 10만원 입금
- 정기예금 신규
- 정기적금 신규
- 대출 신규 (범위내, 공제약관 제외)
- 공제 상품 가입 (생명, 화재)
- 체크카드 신규 발급 (영수증 제출)
- 자동이체 신규
- 가맹점 결제계좌 신규

2020년 출자금
3.0% 배당

자신만만자유예탁금
하루만 맡겨도
최고 1.5%

담보대출 특판(100억)
최대한도 80%
최저이율 3.5%

대출상담 환영
집단대출(중도금, 잔금)
관리형 토지신차 사업비 대출
전세(임차)자금 대출

※상기 이미지는 실제상품과 다를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중복당첨 시 최상위 경품 1개에 한하여 지급함)

신축사옥 임대문의 환영

※임대업종: 한방병원, 병의원, 커피숍, 초법전문점 등

MG금남새마을금고

본점 T.223-8007(대인동 한미쇼핑 1층) 총장지점 T.223-7217(충장로5가입구)